공직사회 '감찰 한파' 몰아친다

총리실, 공사 간부 금품수수 조사
감사원, 도박 공무원 무더기 적발
공직 기강 잡기 전방위 점검 나서

최근 감사원이 상습 도박을 벌인 공무원 수십 명을 무더기로 적발한 데 이어 국무총리실이 공사 간부들의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포착, 조사하고 있어서 공직 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가 공직 사회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직 기강 다잡기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5일 "공사 4곳의 간부들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상납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일부는 사실을 확인해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모 공사 1급 간부 2명은 아는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런 사실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조사에서 드러나자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공사의 본부장급 간부는 부하 직원을 통해 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상납받는 수법으로 금품을 챙겼으며 총리실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총리실은 다른 공사 2곳의 간부들도 공사 발주 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도 최근 3년간 평일에만 60차례 이상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한 '도박 중독' 공무원 30~40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중 차관보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작년 말까지 무려 180여차례나 강원랜드 카지노에 드나들었다.

감사원은 이들 중 일부는 직무 관련 기업이나 민원인에게 돈을 받거나 공금을 유용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정부는 올해가 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없어 주요 국정 과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인 만큼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나 복지부동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신년 연설 말미에서 "올해는 정말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해"라고 강조한 만큼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기강 다잡기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인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것도 공직 사회의 기강해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이기 때문에 더욱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직무태만과 정치 중립 등에 초점을 맞춰 공직 사회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구제역 방역 군인들도 출동 육군 37사단이 5일 제독차량을 동원해 전날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괴산군 사리면 일대에서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등록금·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

정부 민생안정차관회의
13일 물가안정대책 발표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대학등록금의 동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의 1분기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식료품 등 생필품의 경우 가격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해 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오전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물가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사항을 조율했다.

한 참석자는 임종룡 차관이 이날 관계부처 당국자들에게 강한 어조로 "물가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는 소관 품목의 가격불안이 최대한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은 재정부를 중심으로 최종조율을 거쳐 오는 13일 청와대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뒤 물가안정대책으로 공식발표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물가는 1분기에 가장 들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분산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면서 "중앙과 지방 공공요금도 1분기 인상은 최대한 억제한다는데 부처별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일단 의견이 모인 부분은 등록금으로, 정부는 대학등록금이 연초 물가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판단해 국립대의 경우 동결, 사립대의 경우 동결 또는 인상폭 최소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만간 주요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학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와 전북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올해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바 있으며 나머지 국립대와 사립대들도 인상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기요금, 열차료, 우편요금, 도로통행료, 시외.고속버스요금 등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에 대해 유가가 폭등하지 않는 한 1분기까지는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과 표창 등 각종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해 지방 물가의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음료와 스낵 등 식료품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식가공업체와 협의체를 만들어 수시 협의에 착수, 가격 인상의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1일에는 성수품 공급 방안과 교통안전대책 등을 모아 설 민생 대책을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설 민생대책은 성수품 공급과 중소기업.서민 자금공급, 교통안전대책 등을 모아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며 "물가불안요인이 심각하다고 판단, 설 민생 대책과 물가안정 대책을 따로 발표해 정부의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 인사회에서 '물가 정책을 미시적으로만 할 거냐'는 질문에 "물가 대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세우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연합뉴스

우암학원 창학 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건설여부·방식 등 하반기 결정
3월 추진위·TF팀 구성 공청회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와 방식이 올 하반기 최종 결정된다.

광주시는 5일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과 시기에 대해 시민의견수렴과 시의회 설명회 등을 거쳐 올 하반기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는 3월 광주도시철도 2호선 변경안에 대해 국토해양부 승인이 이뤄질 경우 곧바로 도시철도 2호선 추진위원회와 TF팀을 구성하고 공청회와 시민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복안이다.

도시철도 2호선 관련 4대 쟁점인 ▲2호선 조성 여부 ▲건설방식 ▲착공시기 ▲노선 조정 중 건설방식과 착공시기가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가 도심 교통수요를 감안했을 때 2호선의 필요성이 높다고 결론내린 만큼 2호선 조성은 이미 결정됐고, 노선 역시 수차례 공청회 및 시민여론을 들어 결정된 만큼 소폭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오는 2022년까지 사업비 1조7394억원(국비 60% 지방비 40%)을 들여 광주시청~운천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효천역)~조선대~광주역~전남대~일곡~첨단~수완~광주시청을 잇는 41.7㎞ 구간을 지상고가 경량전철(경전철)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해 둔 상태다.

그러나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상고가 방식에 부정적인데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어 향후 사실상 도시철도 2호선 전반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강 시장은 지난 연말 송년기자회견에서 "지상고가(경전철) 방식은 소음과 일조권침해, 도시미관 문제 등으로 대도시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따라서 노면전철방식, 약전철 방식(중전철보다 지하를 덜 파는 방식), 약전철 방식 중에서도 모노레일 방식 중 어떤 것을 도입할지 치열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강 시장은 "노선은 기존 검토했던 노선이 존중돼야 하고, 착공을 한다면 시기를 지방비 부담이 되더라도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이전에 해야할 것인지, 이후에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자전거 갖고 지하철 탄다

광주시 5월부터 일·공휴일 시범실시

광주지하철 전동차에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5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에 지하철 전동차에 자전거를 갖고 탑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전거를 갖고 탑승하는 지하철 이용객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양동역사를 제외한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통해 자전거를 전동차 안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전동차 맨 앞칸이나 뒤칸을 자전거 휴대 탑승 전용칸으로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에 평일과 주말에도 자전거 휴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역사 내에 자전거 계단경사로와 전동차 내에 자전거 고정대가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전거를 갖고 타는 지하철 이용객이 증가하면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시성이 높은 지하철과 접근성이 좋은 자전거를 연계하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5㎞ 이내의 근거리 이동수단인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탑승하면 장거리 이용수단으로 전환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